

전후 70년 담화와 한국: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덮어쓰기와 한국 배제*

윤석정**

| 목 차 |

I. 서론	IV. 국제질서, 관용 그리고 무라야
II.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 신조	마 담화에 대한 덮어쓰기
III. 전후 70년 담화와 무라야마 담 화의 키워드	V. 전후 70년 담화와 한국
	VI. 결론

| 논문요약 |

본고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덮어쓰기’라는 시각을 제시하여 전후 70년 담화의 내재적 논리를 고찰하였다. 전후 70년 담화에서 아베는 21세기 구상 위원회와 공명당의 주장을 고려하여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라는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를 수용하고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전의 일본이 1930년대 이후 국제질서의 도전자가 되었다는 역사관을 제시하여 사죄와 반성의 대상에서 그 이전의 사건들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은 국제사회가 보여준 관용의 마음에 감사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공헌자로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일본의 전후 세대가 짊어질 책임에서 사죄를 배제한다. 분명 아베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표명하였다. 그러나 담화 계승 의사 표시와 함께 국제질서 역사관, 관용에 의한 화해를 동시 기록함으로써 무라야마 담화가 제시하는 역사관 및 책임의식과는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담화 계승의 실질적인 의미가 왜곡, 소실되는 것이다. 전후 70년 담화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은 이 같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덮어쓰기 시도가 가져온 귀결이었다.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18-기획연구-26).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

▪ 주제어: 전후 70년 담화, 아베 신조, 무라야마 담화, 덮어쓰기, 한국

I. 서론

2015년 8월 14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후 70주년을 맞이하며 내각총리대신 담화(이하 전후 70년 담화로 약칭)를 발표하였다. 모두 발언에서 아베는 8월은 일본인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상기시키는 시기이며, 정치는 역사로부터 미래를 위한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담화를 읽어 나갔다.¹⁾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무라야마 담화를 기준으로 전후 70년 담화를 평가하고 있다. 먼저 전후 70년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에 비해 후퇴했다는 주장이 있다. 분명 전후 70년 담화에는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라는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²⁾ 그러나 ‘일본’ 또는 ‘일본 총리’ 등 주체의식을 명시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다루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여기에는 침략을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사죄하고 싶지 않은 아베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村山富市 外 2015, 12-37).³⁾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아베의 의도는 표면적으로는 무

1) 首相官邸 (2015), “安倍内閣總理大臣記者会見,” http://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814kaiken.html. (2019년 2월 5일 검색)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전후 70년 담화의 한국어 번역이 게재되어 있다.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2015), “내각총리대신 담화,” http://www.kr.emb-japan.go.jp/what/news_20150814.html. (2019년 2월 5일 검색) 이상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담화는 주일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2)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는 전후 50주년을 맞이하여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계승하여 왔다. 전후 70년 담화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아베가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라는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를 계승할지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3) 전후 70년 담화를 수사학의 관점에서 논한 연구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전후 70년 담화는 문학적 수사를 동원하여 애매모호한 표현을 구사하는데, 이는 역

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담화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이전부터 아베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해왔던 발언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아베는 무라야마 담화의 ‘후퇴’이기는 하지만 ‘부정’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발언을 해왔는데, 이는 공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의 ‘흠집 내기’ 전략이라는 것이다(하종문 2013, 65).

한편 전후 70년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니라는 논의도 존재한다. 제니퍼 린드는 아베는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면서 전후 70년 담화에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를 넣을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무라야마 컨센서스(村山コンセンサス)로 돌아왔다고 말한다(ジェニファー·リン드 2015, 178). 아베 개인의 생각과는 달리 전후 70년 담화의 역사관은 역사 수정주의와 거리를 둔 무난한 내용이라는 것이다(『読売新聞』 2015/08/15; 『日本経済新聞』 2015/08/15).⁴⁾ 이러한 논의는 아베 정권이 역사문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아베는 분명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부정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으며, 국내 정치 및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남상구 2013; 이지원 2014; 和田春樹 2013).

요약하자면 기존의 논의는 전후 70년 담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제공함과 동시에 담화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을 밝혀내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결과물인 담화의 문구에 대한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그 문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를 거쳐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담화 준비 과정에서 21세기 구상 위원회와 공명당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언급이 되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분석이 충분치 못하다. 아베가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를 수용하고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된 배경에는 두 행위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기존의 논의는 담화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고찰하지 않고

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보다는 전후 세대를 향한 위로와 새로운 일본 만들기를 호소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최순욱 2016).

4) 다니엘·스나이더 (2015), “安部談話: 「和解」へのきっかけとすために,” <https://www.nippon.com/ja/in-depth/g00307/>. (2019년 2월 5일 검색) 아베를 적극 지지해 오던 역사 수정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전후 70년 담화의 역사관은 동경재판사관과 유사하다는 불만이 나왔다(中西輝政·伊藤隆 2015).

있다. 전후 70년 담화는 1930년대 이후부터 전전 일본이 만주사변, 국제연맹 탈퇴 등을 통해 국제질서의 도전자가 되었다는 역사관을 제시한다. 그리고 관용의 마음 덕분에 전후 일본과 국제사회가 화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전후 70년 담화는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역사를 논하고 관용에 의한 화해를 강조하는데, 이를 무라야마 담화와의 연속성 속에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전후 70년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덮어쓰기’를 시도한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전후 70년 담화에서 아베는 21세기 구상 위원회와 공명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를 수용하고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역사를 논하고 관용에 의한 화해를 강조하면서 무라야마 담화 계승의 실질적인 의미가 왜곡, 소실되었다는 것이다.⁵⁾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논쟁 끝에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이 대륙으로의 ‘침략’을 확대했다는 역사관을 제시했고, 아베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공명당의 입장을 수용하여 담화에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 표현을 넣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아베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비롯한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전후 70년 담화는 전전의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부전, 전쟁의 위법화 흐름을 거부하면서 국제질서의 도전자가 되었다는 역사관을 제시한다. 이렇게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전전의 일본을 논하면서 무라야마 담화와는 달리 1930년대 이전의 역사적 사건들은 반성과 사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보여준 관용의 마음에 감사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공헌자로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적극적 평화주의를 관철하겠다고 역설한다. 즉, 일본의 전후 세대가 앞으로 짚어질 과거에 대한 책임에서 사죄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전후 70년 담화에서 아베는 무라야마 담화를 비롯한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말

5) ‘덮어쓰기(overwrite)’란 표시장치나 기억장치에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 어떤 장소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위에 중복 기록함으로써 원래의 정보가 소실되는 기록 방법을 의미한다(김동희 외 2003, 405).

했다.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은 담화가 제시하는 역사관과 과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전후 70년 담화는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역사를 논하고 관용에 의한 화해를 강조함으로써 과거 서술과 일본 전후 세대들의 책임에 대해 무라야마 담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담화 계승의 실질적인 의미가 왜곡, 소실되는 것이다.⁶⁾

상술한 분석은 전후 70년 담화와 한국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것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러일전쟁 긍정론 등 한국을 식민지화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재하다는 점이 주로 지적된다(미야지마 히로시 2015, 11).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는 등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는 연구도 있다(이종국 2016, 76-77). 이에 대해 본고는 전후 70년 담화의 일부분에 대한 비판보다는 담화의 내재적 논리를 고찰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즉, 본고의 시각에 의하면 무라야마 담화가 덮어쓰기 당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은 무라야마 담화의 탄생과 계승과정을 정리한다.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아베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가 전후 70년 담화를 구상하게 되는 과정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담화의 역사관을 살펴본다. 그리고 공명당과의 협의를 거쳐 아베가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를 수용하고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게 되는 경위를 논한다. 제4장에서는 전후

6) 전술했듯이 전후 70년 담화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 중에 아베는 표면적으로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의도는 담화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덮어쓰기’ 관점 또한 아베의 진정한 의도는 무라야마 담화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무라야마 담화를 훼손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논의와 차별점을 지닌다. 기존의 논의는 주체의식의 부재, 문학적 수사의 구사에 주목하여 아베가 간접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무라야마 담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본고의 주장은 아베가 전후 70년 담화의 전체적인 논리와 전개 구성에 중점을 둔다. 즉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되 여기에 국제질서 역사관, 관용에 의한 화해를 덧붙이는 방법을 통하여 무라야마 담화 계승의 실질적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70년 담화가 제시하는 국제질서 역사관과 관용에 의한 화해가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 의미를 어떻게 변용, 왜곡시키는지에 대해 밝힌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분석한다.

II.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 신조

1. 무라야마 담화의 탄생과 담화의 계승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는 ‘전후 50주년의 종전 기념일에 즈음하여’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서 무라야마는 일본이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말하고, 이에 반성과 사죄를 표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근현대사 역사교육 지원, 교류 확대, 전후 처리 사업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⁷⁾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던 역사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었다. 패전 이후 과거에 대한 일본 사회의 기억은 자신들이 전쟁 중에 겪었던 고통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는 전쟁 및 식민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무라야마는 일본 사회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근린 국가들에게 가한 다대한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ジェニファー・リンド 2015, 181 재인용).

이처럼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화해를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미해결의 과거사 문제에 성실히 대응함

7) 外務省 (1995), “戦後50周年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いわゆる村山談話),” https://www.mofa.go.jp/mofaj/press/danwa/07/dmu_0815.html. (2019년 2월 5일 검색)

으로써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진다.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계승된다. 2005년 8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路) 총리는 전후 60년 담화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며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지역의 평화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⁸⁾

우과 정치인으로서 주목받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또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였다. 2006년 9월 총리직에 오른 아베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라야마 담화에서 말했듯이 한국과 중국의 국민들을 포함하여 이들에게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있었다고 각의 결정하여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베 자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⁹⁾

2. 아베 신조와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 문제

상술했듯이 아베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것이 담화에 대한 본심은 아니었다. 총리에서 물러난 이후 아베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安倍晋三·山谷えり子 2009, 55).

무라야마 담화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계승하라고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상 검증이죠. 그래서 저는 무라야마 담화를 대체하는 아베 담화를 내려고 했는데... (중략) 무라야마 씨 개인의 역사관에 일본이 언제까지고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 그때그때 총리가 필요에 따라 독자적인 담화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

8) 首相官邸 (2005), “小泉内閣総理大臣談話,” <https://www.kantei.go.jp/jp/koizumispeech/2005/08/15danwa.html>. (2019년 2월 5일 검색)

9)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2006), “第165回国会予算委員会第2号,” <http://kokkai.ndl.go.jp/SENTAKU/syugiin/165/0018/16510050018002a.html>. (2019년 2월 5일 검색)

론 무라야마 담화가 너무나 일면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균형 잡힌 담화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가 너무나 일면적이라고 평하는 발언에서 아베의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난다. 아베는 새로운 역사 담화를 제시하여 무라야마 담화로부터 탈각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아베가 거부감을 보인 것은 무라야마 담화의 ‘침략’과 ‘사죄’ 표현이었다. 전후 50주년을 맞아 무라야마 정권이 침략을 반성하는 내용의 부전 결의를 국회에 채택하기 위해 나서자 아베는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었다.¹⁰⁾ 이러한 가운데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되자 아베는 이를 저지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과 함께 일본이 앞으로 계속 사죄를 하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読売新聞政治部 2015, 142-143).

결국 아베가 조기에 총리직을 사임하면서 아베 담화는 구상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2012년 12월 자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아베가 다시 총리직에 오르면서 상황은 반전된다. 총리 복귀 후 아베는 자신의 구상을 실천에 옮기고자 나섰다. 총리에 복귀한 아베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는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며 무라야마 담화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월 2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는 전후 7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담화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23일에는 “침략의 정의는 학문적으로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며 따라서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뜻이었다(和田春樹 2013, 77-78 재인용).

위의 발언에 대해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아베는 입장을 변경하게 된다. 5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는 과거 정권의 자

10) ‘침략’ 해석을 부정하는 아베의 역사관을 알려주는 사례로 그의 ‘역사검토위원회’ 활동을 들 수 있다. 역사검토위원회는 1993년 8월 24일 창설된 자민당 보수의원 연맹으로 당시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침략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여 결성되었다. 아베는 이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위원회가 주최한 공부회의 활동을 보면 ‘패전 망국 사관을 찢러보다’, ‘난징대 학살의 허구’ 등 ‘침략 전쟁론’에 대한 강한 부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구유진 2016, 134-140).

세를 전체적으로 계승할 것이며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 신문은 아베가 강경한 역사인식이 외교와 내각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하에 궤도를 수정했다고 평했다(『産経新聞』 2013/05/16).

전후 70주년을 맞은 2015년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새로운 역사담화를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앞으로도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아베가 강조한 것은 미래지향적 담화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¹¹⁾

전후 70년을 계기로 아베 정권으로서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 그리고 전후 평화국가로서의 발걸음, 앞으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를 위해 어떤 공헌을 해나갈 것인가.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것을 영지를 모아 생각하여 새로운 담화에 적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의 발언은 전후 70년 담화는 역사관뿐만 아니라 전후 일본의 발자취, 국가진로를 포괄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발자취, 국가진로는 아베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담화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아베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인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Ⅲ. 전후 70년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

1. 아베의 연설과 ‘침략’ 및 ‘사죄’

2015년 4월 22일 아베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반동 회의에

11) 首相官邸 (2015), “安倍内閣総理大臣年頭記者会見,”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105kaiken.html. (2019년 2월 5일 검색)

서 연설에 임했다. 아베가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난 이후의 연설이었다. 따라서 그가 어떠한 역사인식을 표명할지 주목을 받았다. 총 다섯 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연설에서 역사를 언급한 것은 세 번째 단락인 ‘일본의 맹세’ 부분이다. 아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²⁾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 무력행사에 의해 타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제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 반등에서 확인한 이 원칙을 일본은 지난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 나가는 국가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반등 회의의 원칙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침략’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반성’은 언급하면서 ‘사죄’는 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무라야마 담화의 ‘침략’과 ‘사죄’ 부분에 납득하지 못하는 아베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다.

반등 회의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4월 29일 아베는 미 의회 연설에 나섰다. 이 연설에서도 역사인식이 언급되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베가 깊은 회오(悔悟)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기념비를 보며 전사한 미국의 젊은이들을 생각했다. 역사는 가혹하고도 맹렬한 것이며 그 자신은 깊은 회오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있다는 것이었다.¹³⁾ 아베가 ‘회오’를 사용한 이유는 ‘반성’보다 중압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죄’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사죄와 비슷한 인상을 주기 위한 문장 구성이었다고 한다(読売新聞政治部 2015, 152 재인용).

이상의 연설에서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아베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반성’은 표하되 ‘침략’ 및 ‘사죄’의 직접적인 사용은 회피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이 아베의 구상이었던 것이다.

12) 外務省 (2015), “Unity in diversity~共に平和と繁栄を築く,” https://www.mofa.go.jp/mofaj/a_o/rp/page3_001191.html. (2019년 2월 1일 검색)

13) 首相官邸 (2015), “米国連邦議会上下両院合同会議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演説,”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429enzetsu.html. (2019년 2월 1일 검색)

2. 21세기 구상 간담회와 ‘침략’ 논쟁

2015년 2월 25일 21세기 구상 간담회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의 목적은 전후 70년 담화의 기반이 될 학술적, 이론적 견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제1회 회의에서 아베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제시하였다(21世紀構想懇談會 2015, 3).

- (1) 20세기의 세계와 일본의 발걸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들이 20세기의 경험에서 가져와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 (2) 일본은 전후 70년간 20세기 교훈을 바탕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특히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경제발전, 국제공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3) 일본은 전후 70년간 미국, 호주, 유럽 국가들과 특히 중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어떻게 화해의 길을 걸었는가?
- (4) 20세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아시아와 세계의 비전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일본은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가?
- (5) 전후 70주년을 맞아 일본이 취할 구체적인 시책은 어떠한 것인가?

3월 13일 제2회 간담회가 개최되어 첫 번째 의제가 논의되었다. 발표자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교수는 1930년대 이후 전전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을 전개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전쟁의 위법화, 탈식민지화, 경제적 발전주의의 흐름이 나타났지만 일본은 이러한 세계의 대세를 읽지 못하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 해방을 위해 전쟁을 했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으며 일본은 잘못된 방향 감각 속에 자신들만을 위해 전쟁을 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21世紀構想懇談會 2015, 16-18 재인용).

발표 자료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타오카는 이를 ‘침략’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제2회 간담회가 개최되기 사흘 전인 3월 9일 기타오카는 동경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일본은 침략 전쟁을 했으며 아베 총리가 직접 이를 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産経新聞』 2015/03/10).

기타오카의 발표 이후 간담회 위원들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일부 위

원들은 기타오카의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역사를 공부하는 데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치관으로 그 당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가치관으로 자신이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해방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도 분명 당시에 존재했던 가치관이었으며 현재의 가치관만으로 그 전쟁을 ‘침략’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21世紀構想懇談會 2015, 38 재인용).

이후 다른 위원들로부터 반박이 즉시 일어났다. 먼저 당시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에도 분명 침략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일본이 아시아 해방을 위해 전쟁을 했다는 것은 공문서상 근거가 없다. 만주사변을 비롯하여 중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은 당시의 가치관에서 봐도 분명 침략이라는 주장이었다. 또 다른 반박은 총리 담화의 취지를 봤을 때 현재의 가치관에 따라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총리 담화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담는 것이며 그렇다면 당시의 가치관이 아니라 현재 일본의 시각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요구된다. 미래지향적인 담화를 내기 위해서는 일본이 21세기의 가치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한 입장에서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21世紀構想懇談會 2015, 40-41; 48-49 재인용).

결국 간담회에서는 ‘침략’ 해석이 대세를 이루었다. 8월 6일에 공개된 간담회의 최종 보고서에는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 대륙으로의 침략을 확대’했다고 평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족자결, 전쟁 위법화, 민주화, 경제적 발전주의라는 흐름에서 이탈하여 세계의 대세를 읽지 못하고 무모한 전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다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논하고 있다. ‘침략’ 해석에 대한 이의는 각주 표기에 그쳤다.¹⁴⁾ 간담회의 좌장인 니시무로 타이조(西室泰三)는 보고서 제출 이후 개최된 기

14) 각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법상 ‘침략’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2) 역사적으로 고찰해도 만주사변 이후를 ‘침략’으로 단정하는 것에 이론이 있다는 것, (3) 타국이 유사한 행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행위만을 ‘침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복수의 위원으로부터 ‘침략’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이의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를 비롯한 간담회의 전반적인 활동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할 것. 首相官邸 (2015), “20世紀を振り返り21世紀の世界秩序と日本の役割を構想するための有識者懇談会(21世紀構想懇談会),” https://www.kantei.go.jp/jp/singi/21c_koso/. (2019년 2월 2일 검색)

자 회견에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침략이라는 현실이 있었다”고 말했다(『読売新聞』 2015/08/07). 이러한 간담회의 제안은 전후 70년 담화에 반영된다.

2. 공명당과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

아베가 전후 70년 담화를 제시하겠다는 생각을 밝히고 나서 담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또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즉, 아베가 전후 70년 담화를 각의 결정 형식으로 표명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을 받은 것이다. 각의 결정은 정부의 중요 정책과 기본 방침을 대상으로 하며 각료 전원의 서명에 의해 성립된다. 따라서 각의 결정을 거친 내용은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가 되며 이후의 정권도 이를 계승하는 것이 관례였다. 전후 50주년의 무라야마 담화, 60주년의 고이즈미 담화 모두 각의 결정을 거침으로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서 확립된 것이었다.

아베의 생각은 전후 70년 담화를 총리의 개인 담화로 낸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공명당의 존재 때문이었다. 전후 70년 담화를 각의 결정으로 대처할 경우 연립을 맺고 있는 공명당과의 조정이 필요했다. 공명당의 입장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한 기존의 담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각의 결정 과정에서 공명당의 의견을 수용하다 보면 담화에 아베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아베의 측근들이 주장하듯이 “제일 우선시해야 할 것은 아베 총리다운 담화를 제시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각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었다(『朝日新聞』 2015/04/03).

그러나 아베는 각의 결정으로 입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담화가 발표되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경우 야당이 공명당 소속 각료의 의견을 질의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럴 때 공명당 소속의 각료가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각내 불일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베는 각의 결정의 과정을 통해 담화의 내용에 관해 공명당과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朝日新聞』 2015/07/08).

8월 7일 담화 문구를 협의하기 위해 자민당과 공명당 간부 간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공명당 측에서는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이 참석하였다. 아베는 담화의 원안과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최종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내용을 설명하였다. 담화의 원안에는 무라야마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이 강조되었으나 ‘사죄’에 해당하는 표현은 없었다. 또한 지난 대전에 대한 반성은 들어 있으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공명당 측은 ‘사죄’를 명기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朝日新聞』 2015/08/09). 이처럼 공명당과의 협의는 아베가 담화를 구성하는 데 커다란 제약 조건이 되었다.

8월 14일 아베는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서 아베는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하고, 모든 민족 자결의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은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담화에는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가 모두 들어갔다.

아베가 그동안 거부해 왔던 ‘침략’ 표현을 넣은 것은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제안이 영향을 미쳤다. 담화 발표 이후 아베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¹⁵⁾

침략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이죠, 이번 담화는 21세기 구상 위원회의 유식자 분들이 공유한 인식,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 있듯이 그중에는 침략이라고 평가되는 행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화에는 사변, 침략, 전쟁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어떠한 무력 위협과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15) 주 1과 같음.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난 대전에의 깊은 회오의 마음과 함께 맹세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사죄’에 대해 살펴보자. 아베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¹⁶⁾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한 사죄의 마음은 전후 내각이 일관되게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전후 50년에는 무라야마 담화라는 형태로 표명되었고 나아가 60년을 계기로 나온 고이즈미 담화에도 그러한 사죄의 마음이 계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대 내각이 표명한 마음을 저의 내각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입니다.

전후 70년 담화를 보면 아베가 주체가 되어 ‘사죄’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내각이 표명해 왔던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위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베는 자신이 총리직을 맡고 있는 내각의 입장에서 ‘사죄’를 표하고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술했듯이 공명당과 협의하기 전까지 담화의 원안에는 ‘사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었다. 아베는 공명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죄’를 표하고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IV. 국제질서, 관용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덮어쓰기

1. 일본의 역사 문제와 국제질서

2015년 7월 9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아베는 20세기 역사를 되돌아보며 전후 일본의 발자취에 대해 회고하는 연

16) 주 1과 같음.

설을 했다. 연설에서 아베는 20세기의 역사로부터 인류는 무력을 배경으로 타국을 협박하지 않을 것, 타국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타국의 동의 없이 영토를 변경하지 않을 것, 타민족을 지배하고 종속시키지 않을 것, 천부인권을 존중하고 성별 및 인종 등에 의해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것 등을 교훈으로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은 지난 전쟁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바탕으로 평화 국가의 길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¹⁷⁾ 아베의 연설은 역사를 회고하면서 전후 일본이 전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가로 재탄생했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아베의 인식은 전후 70년 담화의 준비 과정에서 국제질서 개념과 접목된다. 4월 22일 21세기 구상 간담회 제4회 회의에서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교수는 역사인식 문제를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를 인식하는 데 양자 관계는 물론 일본이 국제사회와 국제질서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동시에 고찰해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참화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는 민족자결과 탈식민주의, 부전, 전쟁의 위법화 등 평화정착의 움직임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만주사변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쏟아왔던 노력을 파괴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당시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 강대국들이 일본에 대해 분개한 것은 일본이 평화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호소야의 주장이었다(21世紀構想懇談會 2015, 124-130 재인용).

이러한 논의를 거쳐 전후 70년 담화는 다음과 같은 역사관을 제시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지화, 국제연맹의 창설, 부전조약 등 새로운 국제사회의 조류가 탄생했다. 당초에는 일본도 보조를 함께했지만 세계공황이 일어나고 경제 블록화가 추진되자 고립감을 느낀 나머지 이를 힘의 행사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세계의 대세를 보지 못하게 되었고 만주사변, 국제연맹 탈퇴 등 일본은 국제사회가 엄청난 희생 위에 구축하려 했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었다. 이후 일본은 지

17) 首相官邸, “CSIS主催シンポジウム「20世紀の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の省察—21世紀の新しいビジョンに向かって」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挨拶,”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709csis.html. (2019년 2월 4일 검색)

난 대전에 대한 깊은 회오의 마음과 더불어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고 법의 지배를 존중하며 부전의 맹세를 견지해 왔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국제질서의 도전자가 되었다는 반성 속에 새로운 국가 건설에 나섰다. 이것이 아베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었다. 아베는 담화 발표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⁸⁾

이전에 일본은 세계의 대세를 보지 못하게 되어 외교적·경제적 경색을 힘의 행사에 의해 타개하고 또는 그 세력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부전의 맹세를 견지하겠다는 것이 이번 담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전후 70년 담화의 역사관을 무라야마 담화와 비교해 보자.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하는데 이는 일본의 근현대사에 있었던 모든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전후 70년 담화는 일본이 만주사변부터 국가 정책을 그르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말했지만 1930년대 이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 구조는 국제질서 개념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간담회의 논의를 되돌아보면 제2회 간담회의 논쟁은 1930년대 이후 전전 일본의 대외정책을 침략으로 해석할지 여부, 즉 어디까지나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사건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제4회 간담회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전, 전쟁의 위법화 흐름이 등장했는데 일본이 이에 동조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것으로 간담회의 역사관이 정리되고 담화에 반영되었다. 이는 담화의 준비 과정에서 1930년대 이전 일본의 대외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이 결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전전의 일본을 논하면서 1931년부터 일본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역사관이 간담회 내부에서 정착되고 논의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18) 주 1과 같음.

전후 70년 담화에서 아베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과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 질서의 개념으로 역사를 논함으로써 무라야마 담화에서 논하는 것과는 다른 역사 서술을 제시하고 그 결과 담화 계승의 실질적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2. 관용에 의한 화해와 전후 일본의 책임

전후 70년 담화는 전후 일본과 국제사회와의 화해를 강조한다. 담화에 의하면 관용의 마음 덕분에 일본은 전후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담화에 관용이 담기게 된 경위를 살펴보자. 간담회의 제4차 회의에서 구보 후미아키(久保文明) 교수는 역사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 즉 가해국과 피해국의 인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유대인 문제의 경우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관대함을 보이고 화해에 적극적이었다고 평했다. 그리고 미국은 패전국 일본에게 관대함을 보였으며 오늘날의 미일 관계는 상호 신뢰, 공통의 가치관 등으로 결속된 관계라고 평했다(21世紀構想懇談會 2015, 110-122 재인용).

그렇다면 전후 70년 담화는 국제사회와 화해를 이뤄낸 전후 일본이 과거에 대해 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제시하는가? 여기서 담화는 전후 일본의 사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언한다. 일본에서는 전후 태어난 세대가 인구의 80퍼센트를 넘어섰는데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대들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앞서 아베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맥락에서 ‘사죄’를 표했다. 아베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사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죄를 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아베가 사죄 외교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 것은 전쟁 중의 일본인과 지금의 일본인이 같은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기타오카가 주장하듯이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 갔던 정치인들은 동경제판에서 처벌되었고 지난 전쟁과 상관없는 전후 세대들이 전쟁의 직접적인 책임을

깊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毎日新聞』 2015/06/03). 정리하자면 담화의 주장은 전쟁과 상관없이 없는 전후 세대의 일본인들에게는 사죄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전후 70년 담화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국제사회가 일본에게 보여준 관용의 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담화는 현대 일본을 이루는 세대와 다음 세대가 미래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선인들의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치열하게 적으로 싸웠던 미국, 호주,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참으로 많은 나라들이 은원을 초월해 선의의 지원을 뺏어준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점을 일본인들을 미래로 전해 나가야 하며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⁹⁾

전후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전쟁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우리들의 자식들과 손자들, 그 후의 세대, 미래의 아이들이 사죄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 그러한 숙명을 깊어지게 해서 안 된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화 속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다시 우리 일본인들은 세대를 넘어 과거의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지난 대전 이후 적이었던 일본에 선의와 지원의 손을 뻗어주고 국제사회로 이끌어준 국가들, 그 관용의 마음에 대해 감사해야 하며 그러한 감사의 마음은 세대를 넘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질서의 공헌자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힘을 쏟는 것이다. 담화의 마지막 부분에는 국제질서의 도전자가 되었던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기면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기본적 가치를 견지하며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하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9) 주 1과 같음.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위원인 가와시마 신(川島眞) 교수는 담화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었던 과거’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細谷雄一 外 2017, 182).

특히 아베 담화의 마지막 쪽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어 버린 과거’, 즉 근대 일본은 국제질서에 동조, 또는 그중에 공헌하는 쪽이었는데 어느 시기에 도전자가 되어버린 것을 반성하고 전후에는 도전자가 되지 않고 공헌자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지만 작금의 국제정세에 일어나는 커다란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일본은 기존의 국제적 질서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은 절대 도전자가 되지 않겠다’고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도전자가 될지도 모르는 국가와 존재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됩니다.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전후 70년 담화에는 기본적 가치 공유하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한다는 아베 정권의 발상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일본의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다.

이처럼 전후 70년 담화는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표명했지만 과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 무라야마 담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전후 70년 담화는 관용에 의한 화해를 주장하며 전후 세대들에게는 관용에 감사할 것, 적극적 평화주의를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무라야마 담화가 말하는 책임의식, 즉 과거에 대한 사죄와 미해결의 과거사 문제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다.

V. 전후 70년 담화와 한국

1. 무라야마 담화와 한국

지금까지 전후 70년 담화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말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역사를 논하고 관용에 의한 화해를 제시하면서 무라야마 담화 계승의 실질적인 의미가 왜곡, 소실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전후 70년 담화의 내재적 논리 속에 한국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무라야마 담화 속에 한국이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부터 검토하겠다. 무라야마 담화는 중국에 대한 침략뿐만 아니라 한국을 식민지 지배한 것까지 포함하여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이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는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무라야마 담화의 형태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명문화된 것이다.

물론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지만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의 토대가 되면서 이후 한일 협력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자리 잡는다.²⁰⁾

무라야마 담화가 제시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1998년의 한일 공동선언으로 계승되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 惠三) 총리는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20) 한국 사회에서도 무라야마 담화는 한일 협력관계를 위한 전제조건을 수행할 수 행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배상에 대해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담화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최희식 2017). 이와 같이 무라야마 담화는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의 취지는 전후 70년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그 맥락에서 한국의 위상을 밝힌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라야마 담화가 한일 협력관계의 토대이자 전제조건을 수행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서술한다는 점을 밝힌다.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사죄”를 표명하였다.²¹⁾ 한일 공동선언은 한일 간의 외교문서로는 처음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공동선언의 역사관은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관을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로 재구성한 것이었다.

나아가 한일 공동선언은 양국의 협력을 공통의 가치관 속에 정립하고 있다. 동 선언에서 한일 정상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정치, 안보, 경제 및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²²⁾ 무라야마 담화에서 제시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토대로 한일 관계는 98년의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이 추구해야 할 공통의 목표와 이념을 공유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한일 공동선언의 기조는 간 담화로 이어진다. 2010년 8월 10일 한일병합 100주년을 배경으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정치적 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한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며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였다. 이어서 한일 관계는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하고 긴밀한 이웃국가라고 평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²³⁾ 이처럼 무라야마 담화 이후 한일 공동선언, 간담화를 거치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관과 한일협력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었다.

2. 전후 70년 담화의 한국 배제와 위안부 합의

그러나 전후 70년 담화에 들어와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은 명백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먼저 역사관부터 보겠다. 전술했듯이 전후 70

21) 外務省 (1998), “日韓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https://www.mofa.go.jp/mofaj/kaidan/yojin/arc_98/k_sengen.html. (2019년 2월 1일 검색)

22) 위의 글.

23) 首相官邸 (2010), “内閣總理大臣談話,” <https://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08/10danwa.html>. (2019년 2월 2일 검색)

년 담화는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이 침략을 저질렀다는 해석을 수용하여, 전전의 일본이 당시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해 구축하려던 국제질서에 도전했다는 역사관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그 이전 시기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담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00여 년 전의 세계에는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광대한 식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배경으로 식민지 지배의 물결은 19세기 아시아에도 밀려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입헌정치를 내세우며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일러전쟁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강조하듯이 전후 70년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어디까지나 세계의 대세에 대한 이차적 반응이었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미야지마 히로시 2015, 11 재인용).

이와 같은 논리 구조는 국제질서 개념으로 역사를 논하면서 성립된 것이었다. 여기서는 전후 70년 담화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살펴보자. 분명 전후 70년 담화에는 무라야마 담화에 기원을 두는 ‘식민지 지배’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전후 70년 담화에서 의미하는 ‘식민지 지배’란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의 논리가 등장했는데 일본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여 영토 확장을 시도한 것을 칭하는 것이다. 기타오카가 주장하듯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민족자결이 원칙인데 타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했다”는 것이다(『毎日新聞』 2015/06/03). 이처럼 국제질서로 전전 일본의 역사를 논함으로써 무라야마 담화의 ‘식민지 지배’ 표현 계승의 의미도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다.

역사관 이후 전후 70년 담화는 전후 일본과 국제사회와의 화해를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아직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화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후 70년 담화는 한국이 관용을 정신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일이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재하고 있다는

집이다.

21세기 구상 간담회 제6회 회의에서 발표를 담당한 야마우치 마사유키(山内昌之) 교수의 주장을 검토해 보자. 그는 “일본과 한국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 역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자세를 비판했다. 천년이 지나도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양자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치외교의 장에서 타협과 양보는 본질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었다.²⁴⁾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야마우치는 한국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사죄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일본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논했다(21世紀構想懇談會 2015, 227-228 재인용). 관용에 의한 화해를 주장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한국에게 화해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후 70년 담화는 협력의 대상에서도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 담화에서 아베는 국제질서의 도전자가 되었던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기면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는 한국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12일 아베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칭했다. 2014년까지 아베는 ‘한국은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평했는데 앞부분을 삭제한 것이다.²⁵⁾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한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줄곧 경색국면이었던 반면 한중 관계는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베 정권 내에서는 한국이 미일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접근하여 한미일 안보관계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생각이 주류가 되었다(読売新聞政治部 2015, 227-233 재인용). 즉, 아베 정권은 자신들이 구상하는 대중 견제 연합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담화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되돌아보면 무라야마 담화에서 제시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24)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2013년의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아베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다.

25) 国会會議録検索システム (2015), “第189回国会本會議第5号,” <http://kokkai.ndl.go.jp/SENTAKU/syugiin/189/0001/18902120001005a.html>. (2019년 2월 3일 검색)

를 토대로 한일 관계는 98년의 공동선언과 2010년의 간담화를 통해 양국이 추구해야 할 공통의 협력 목표와 이념을 공유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전후 70년 담화에 들어와서 단절된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가 말하는 책임의식, 즉 과거에 대한 사죄와 미해결의 과거사 문제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분명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갖는 한국과의 협력을 염두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후 70년 담화는 전후 세대들의 책임으로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을 협력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후 70년 담화와 한일 위안부 합의와의 연관성을 고찰하겠다. 전후 70년 담화는 20세기 전시에 수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된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기면서 앞으로 일본은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는 시대를 주도하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던 한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고, 아베 총리를 대신하여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²⁶⁾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전후 70년 담화가 발표되고 나서 4개월 이후의 일이었다. 아베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전후 70년 담화가 제시하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아베는 합의의 의의에 대해 기자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毎日新聞』 2015/12/28).

8월의 총리 담화에서 말했듯이 역대내각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

26) 외교부 (2015),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http://www.mofa.go.kr/www/brd/m_20140/view.do?seq=302418. (2019년 2월 2일 검색)

명해 왔다. 그러한 생각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식과 손자, 그 이후 세대들의 자손들에게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그러한 결의를 실행에 옮기는 합의였다. 이 문제를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절대 끌고 갈 수 없다. 70년이라는 시점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들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베의 발언에서 전후 70년 담화의 사죄 논리가 연상된다. 아베는 합의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든 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이었다(『연합뉴스』 2016/10/03).

VI. 결론

전후 70년 담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아베가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를 수용하고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전후 70년 담화는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역사를 논하고 관용에 의한 화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무라야마 담화와 연속성 속에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전후 70년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덧어쓰기’를 시도한다는 시각을 제시하여 전후 70년 담화의 내재적 논리를 고찰하였다.

전후 70년 담화에서 아베는 21세기 구상 위원회의 제안, 공명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식민지 지배 및 침략의 과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전의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부전, 전쟁의 위법화 흐름을 거부하면서 국제질서의 도전자가 되었다는 역사관을 제시한다. 이렇게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전전의 일본을 논하면서 1930년대 이전의 역사적 사건들은 반성과 사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보여준 관용

에 감사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공헌자로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적극적 평화주의를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일본의 전후 세대가 짊어질 책임에서 사죄를 배제한다. 이처럼 전후 70년 담화는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역사를 논하고 관용에 의한 화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과거 서술과 일본 전후 세대들의 책임에 대해 무라야마 담화와는 다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담화 계승의 실질적인 의미를 왜곡, 소실시키는 것이다. 전후 70년 담화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은 한국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이 같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덮어쓰기가 가져온 논리적 귀결이었다.

본고의 분석이 한일 관계에 시사하는 점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덮어쓰기가 한일 공동선언과 간 담화의 논리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전후 70년 담화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추구할 공통의 역사인식과 가치관을 규정하던 토대 자체가 허물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보통 국가가 되려는 아베 정권의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등 개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일 간에 공통의 역사인식을 도출하고 협력을 논할 수 있는 준거틀을 다시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무라야마 담화, 한일 공동선언, 간 담화는 한일 양국이 계승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자 지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구유진 (2016).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 보수의원연맹 연구: 일본 정책결정과정
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일본 과워엘리트의 대한정책』. 선인, pp. 125-163.
- 김동희 외 (2003). 『전기용어사전』. 일진사.
- 남상구 (2013).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제46집, pp.
227-267.
- 미야지마 히로시 (2015). “아베 담화에 나타난 일본의 역사인식과 그 비판.” 『역사비
평』. 113호, pp. 9-18.
- 이종국 (2016).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의 ‘합의’ 형성과 한계: 중요 ‘담화’를 소재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1권, pp. 61-85.
- 이지원 (2014). “일본의 ‘우경화’: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 아베식 ‘전후체제 탈각’의
한계.” 『경제와 사회』. 제101호, pp. 53-86.
- 최순욱 (2016). “아베담화의 문학적 수사(rhetoric) 읽기.” 『일본문화연구』. 제58집,
pp. 327-349.
- 최희식 (2017).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는 한국사회에 수용된 것일까?” 『한일관
계 50년의 성찰』. 아시아연구기금, pp. 121-145.
- 하종문 (2013).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정권.”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pp. 51-72.
- ジェニファー・リンド (2015). “『村山コンセンサス』の形成と課題.” 『戦後保守』は終
わったのか—自民党政治の危機』. 東京: 角川新書, pp. 151-184.
- 読売新聞政治部 (2015). 『安倍官邸vs習近平—激化する日中外交戦争』. 東京: 新潮社.
- 細谷雄一 外 (2017). “東アジアの歴史認識と国際関係—安倍談話を振り返って.” 『戦
後日本の歴史認識』.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 165-224.
- 安倍晋三·山谷えり子 (2009). “保守はこの試練に耐えられるか.” 『正論』. 2月号, pp.
50-59.
- 21世紀構想懇談會 (2015). 『戦後70年談話の論点』. 東京: 日本經濟新聞出版社.
- 中西輝政·伊藤隆 (2015). “『安部談話懇談會』の驚愕の内幕と歴史問題のこれから.”
『正論』. 11月号, pp. 66-79.
- 村山富市 外 (2015). 『検証安倍談話—戦後70年村山談話の歴史的意義』. 東京: 赤石書店.
- 和田春樹 (2013). “安倍首相にとっての歴史認識問題.” 『世界』. 第847号, pp. 74-83.

2. 기타

- “日야베 ‘위안부 사죄 편지,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해.’” 『연합뉴스』. 2016년 10월 3일.
- “[스캐너]侵略明記肯定が大勢有識者懇報告中韓との和解「努力を」.” 『読売新聞』. 2015년 8월 7일.
- “<そこが聞きたい>戦後70年談話北岡伸一氏.” 『毎日新聞』. 2015년 6월 3일.
- “首相70年談話「侵略」認定を北岡座長代理.” 『産経新聞』. 2015년 3월 10일.
- “安倍談話、閣議決定するの?公明「事前調整が不可欠」村山・小泉談話は閣議決定.” 『朝日新聞』. 2015년 4월 3일.
- “安倍談話「おわび」盛らず首相原案、公明「侵略」明示要求.” 『朝日新聞』. 2015년 8월 9일.
- “慰安婦問題: 日韓解決合意安倍首相発言要旨.” 『毎日新聞』. 2015년 12월 28일.
- “戦後70年談話歴史の教訓を胸に未來を拓こう.” 『読売新聞』. 2015년 8월 15일.
- “村山談話首相、継承へ軌道修正外交・支持率の影響懸念.” 『産経新聞』. 2013년 5월 16일.
- “70年談話、公明と調整へ「閣内不一致」避ける狙い首相方針.” 『朝日新聞』. 2015년 7월 8일.
- “70年談話を踏まえ何をするかだ.” 『日本経済新聞』. 2015년 8월 15일.
- 외교부 (2015).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http://www.mofa.go.kr/www/brd/m_20140/view.do?seq=302418. (2019년 2월 2일 검색)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2015). “내각총리대신 담화.” http://www.kr.emb-japan.go.jp/what/news_20150814.html. (2019년 2월 5일 검색)
-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2006). “第165回国会予算委員会第2号.” <http://kokkai.ndl.go.jp/SENTAKU/syugiin/165/0018/16510050018002a.html>. (2019년 2월 5일 검색)
- _____ (2015). “第189回国会本会議第5号.” <http://kokkai.ndl.go.jp/SENTAKU/syugiin/189/0001/18902120001005a.html>. (2019년 2월 3일 검색)
- ダニエル・スナイダー (2015). “安倍談話: 「和解」へのきっかけとするために.” <https://www.nippon.com/ja/in-depth/g00307/>. (2019년 2월 5일 검색)
- 首相官邸 (2005). “小泉内閣総理大臣談話.” <https://www.kantei.go.jp/jp/koizumispeech/2005/08/15danwa.html>. (2019년 2월 5일 검색)
- _____ (2010). “内閣総理大臣談話.” <https://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08/10danwa.html>. (2019년 2월 2일 검색)
- _____ (2015). “米国連邦議會上下両院合同會議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演説.”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429enzetsu.html. (2019년 2월 1일 검색)

- _____ (2015). “安倍内閣総理大臣年頭記者会見.”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105kaiken.html. (2019년 2월 5일 검색)
- _____ (2015). “20世紀を振り返り21世紀の世界秩序と日本の役割を構想するための有識者懇談会(21世紀構想懇談会).” https://www.kantei.go.jp/jp/singi/21c_koso/. (2019년 2월 2일 검색)
- _____ (2015). “CSIS主催シンポジウム「20世紀の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の省察—21世紀の新しいビジョンに向かって」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挨拶.”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709csis.html. (2019년 2월 4일 검색)
- 外務省 (1995). “戦後50周年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いわゆる村山談話).” https://www.mofa.go.jp/mofaj/press/danwa/07/dmu_0815.html. (2019년 2월 5일 검색)
- _____ (1998). “日韓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https://www.mofa.go.jp/mofaj/kaidan/yojin/arc_98/k_sengen.html. (2019년 2월 1일 검색)
- _____ (2015). “Unity in diversity~共に平和と繁榮を築く.” https://www.mofa.go.jp/mofaj/a_o/rp/page3_001191.html. (2019년 2월 1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9년 02월 10일 |

| 논문심사일 : 2019년 02월 15일 |

| 게재 확정일 : 2019년 03월 14일 |

| ABSTRACT |

Abe's 70th-Anniversary Statement and Korea: Overwriting Murayama Statement and Exclusion of Korea

Suk-Jung YOON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Kookm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herent logic of Abe's 70th-Anniversary Stat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overwriting Murayama Statement.

Considering the advisory panel and Komeito, Abe expressed remorse and apology by accepting the key words of Murayama Statement. And he emphasized that previous Japanese position such as Murayama Statement would remain unshakable into the future.

At the same time, he excluded colonial rules in 1910's from objects of remorse and apology by stating Japan ended up becoming a challenger to the international order in 1930's. And he exhorted Japanese, remembering tolerance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 hoist the flag of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In other words, Abe did not regard apology as Post-war Japan's responsibility. In this way, 70th-Anniversary Statement nullify essence of Murayama Statement. In related to Korea-Japan relations, 70th-Anniversary Statement did not mention directly Korean issue such as colonial rule and apology. As above analysis suggested, the exclusion of Korea brought in process of overwriting Murayama Statement.

- Key words: 70th-Anniversary Statement, Abe Shinzo, Murayama Statement, Overwriting, Korea